

1조2천억 투입 ‘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전 불 붙었다

과기부, 13일까지 부지 공모
나주·군산·포항·경주 도전장
지반 등 평가 이달말 결과 발표

‘꿈의 에너지’로 불리는 핵융합(인공태양) 연구시설 유치를 위한 전국 지자체들의 경쟁이 본격화됐다. 10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부지 공모 마감을 앞두고 현재까지 나주·전북 군산·경북 포항·경북 경주가 유

의사를 공표했다. 앞서 대전·울산·경남 창원도 사업을 검토했으나 부지 적정성이나 예산 등 문제로 신청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부지 공모의 평가 항목은 기본 요건(40점), 입지 조건(50점), 정책 부합성(10점) 등 3개다. 공모에 도전하는 4개 지자체는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50만㎡ 이상의 편평한 부지와 4차선 이상 진입로, 250MVA 전력 인입선로 등을 확보하고 있다고 공통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여기에 지질 안정성이나 산학연 집적 환경 등을 각자의 강점으로 피력하고 있다.

전남도는 후보지인 나주시 왕곡면 에너지 국가산단 지반이 단단한 화강암인 점과 최근 20년간 규모 3.0 이상 지진도 없었던 점을 강조하고 있다. 지반에 대한 안정성은 지난 2020년 방사광가속기 유치 당시에도 이미 검증 받았다. 한국전력 본사와 670여개 전력 기재 기업,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켄텍) 등 산학연 인프라가 집적돼 있고, 20차례 이상 주민설명회와 전 시민 서명운동을 통해 주민 수용이 높게 형성된 점도 경쟁력으로 꼽고 있다. 또 내년 중 인공태양 핵융합 연구의 핵심 기반인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를

한국에너지공대에 갖춘 후 본격 가동하게 된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광주·전남·전북 등 호남에 대형 국가 연구시설이 부재한 점도 나주 유치당위성에 힘을 싣고 있다. 호남과 달리 영남권에는 이미 포항 방사광가속기, 충청에는 중이온가속기가 자리 잡고 있다. 경북에는 대신 지역공약으로 1조원 규모의 국가 고자기장연구소 설립이 예정돼 있다. 전북도는 새만금 지역이 적합하다는 근거로 군산에 이미 2012년부터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플라즈마기술연구소가 구축돼 연구를 수행 중인 점과 새만금 재생에너지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등 관련 연구기관이 인접한 점을 내세우고 있다. 경북도 역시 포항에 포항공과대학교(포스텍), 한동대학교, 가속기연구소 등 핵심 연구시설이 포진해있고 핵융합 연계에 필요한 철강 공단이 집적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경주시는 문무대왕과학연구소 등이 들어서는 혁신 원자력 연구단지 내에 연구시설 부지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경주시는 또 이미 원전과 방폐장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지반·지질 안정성과 주민 수용 기반이 확보됐다는 점도 부각하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14~20일 사전 실

무현장 조사 등을 거쳐 이달 말 최종 부지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사업에는 핵융합 핵심 기술 개발 3,500억원, 실증 인프라 구축 8,500억원 등 2027년부터 2036년까지 총 1조 2,000억원이 투입된다. 인공태양은 바닷물에서 얻을 수 있는 중수소와 삼중수소를 연료로 삼아 태양 내부의 에너지 생성 원리를 지구에 구현하는 기술이다. 수소 1g으로 석유 8t에 맞먹는 전력을 생산할 만큼 효율적이며, 이산화탄소를 거의 배출하지 않아 탄소중립 실현에 최적화된 청정에너지이자 ‘꿈의 에너지원’으로 불린다. 정근산 기자



10일 광주시청 시민홀에서 열린 2025 광주 주민자치공동체 한마당에서 강기정 광주시장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태규 기자

최미숙 도의원 “목포·구례 관광특구 ‘무늬만 특구’”

“맞춤형 활성화 전략 필요”

목포와 구례 관광특구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무늬만 특구’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경제관광문화위 최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신안2)은 최근 열린 전남도 관광체육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전남의 관광특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점검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관광진흥법’ 제70조에 따라 현재 전국에는 36개의 관광특구가 지정돼 있고, 전남에는 목포와 구례 2곳이 포함됐다.



하지만, 두곳 모두 최근 1년간 외국인 관광객 10만명 이상이라는 지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 의원은 “관광특구는 외국인 유치를 전제로 세제·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라며 “외국인 방문실적이 저조한 상황에서 제도운영의 실효성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최 의원은 이어 “2004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관광특구 지정·운영 권한

이 시·도로 이양된 이후 전남도가 체계적인 평가 및 현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별 특화 자원에 맞춘 맞춤형 마케팅과 글로벌 홍보 채널 강화, 외국인 체류형 프로그램 개발 등 특구 차별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관광특구 제도는 단순히 명칭을 유지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국제관광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정책수단이 돼야 한다”며 “전남의 관광특구가 ‘이름뿐인 제도’에 머물지 않고 실질적 글로벌 관광거점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추진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근산 기자

“광주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비 전액 국비”

윤호중 행안장관, 광주 방문
프로그램 실의 확대 등 약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그동안 광주시가 50% 부담했던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운영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10일 오전 광주 서구 화정동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를 방문해 “내년부터 치유센터 운영비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그동안 치유센터의 운영

비용은 국비와 시비 각각 50% 부담해 왔다”면서 “국가가 치유센터를 마련하고 운영 비용을 광주시에 부담하게 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지적을 많이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년부터 치유센터 운영비 전액을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기로 했고, 이미 예산도 편성해놨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살내 프로그램으로만 운영되던 치유·재활 프로그램을 실외에서도 확대하겠다”며 “서비스 이용자들이 야외로 나가서서 가슴을 활짝 펼 수 있는 치유 시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장관은 또 “5·18민주화운동 등 국가폭력 피해자들이 마음 한켠에 가지셨던 상처를 털어버릴 수 있는 마음치유의 장소가 국립 트라우마치유센터가 됐으면 좋겠다”며 “국가 폭력으로 어려움을 당하신 모든 분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잘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 장관은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했고, 오후에는 주민자치 30주년 기념 전라권 간담회와 통합돌봄 업무 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했다. 황애란 기자

광주~나주 잇는 광역철도 건설사업 속도낸다

3개 지자체 이달 중 합의문
광역연합 1호 안전 신속추진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공동사무 1호 안전인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0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양시도는 이달 중 나주시와 광주~나주 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합의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3개 지자체 단체장들은 당초 이날 나주에 모여 합의문을 공동 발표할 계획이었지만, 일부 사정으로 일정이 취소됐다. 지난달부터 공동 발표 일정을 조율해 온 3개 지자체는 더 이상 발표를

미룰 수 없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합의문 문구 작성이 완료되는 즉시 별도의 발표 행사없이 보도자료 형태로 이를 시민들에게 알리기로 했다. 합의문에는 3개 지자체의 사업 추진 의지, 확정 노선, 향후 운영 방안 등이 담겼다. 앞서 확정된 노선은 광주 상무역(기점)~효천역~대촌동~남평역~나주 혁신도시~나주역(종점)으로, 총연장 28.77km다. 이중 광주 구간은 14.31km(49.75%), 나주 구간은 14.46km(50.3%)다. 총사업비는 1조6,543억원으로 국비 1조1,580억원, 지방비 4,963억원이다. 지방비 부담액은 광주시 2,469억원, 전

남도 1,247억원, 나주시 1,247억원이다. 사업비 변동이 있는 경우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 광역철도 운영 방법과 운영비용 부담은 실시설계 완료 전 별도 협약을 통해 정하기로 했다. 시·도 관계자들은 “흔들림 없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나주 광역철도는 지난 7월 경제성 등 사업 타당성 부족을 이유로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탈락했다. 이 과정에서 광주시와 전남도·나주시의 의견 차이로 노선을 명확하게 설정하지 못해 부정적 영향을 끼쳤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정근산 기자

www.goldclass.co.kr

단, 한채의 집을 짓더라도 내 집 짓는 정성으로
고객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담은 명품주거공간으로
삶의 프리미엄을 더해 온 기업, 골드클래스
그 기술과 정성으로 고객감동을 더해 나가겠습니다

행복

위에 지은 집!

GOLD CLASS

골드클래스

골드클래스(주) · 골드더움(주) · 골드종합건설(주) · 보광건설(주) · 보광종합건설(주)
■ 주 소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01 (화정동) 골드클래스 ■ 문 의 : 062) 233-3999